

구 자립복지재단 부지에 장애인 커뮤니티타운 조성

전북자치도, 구 자립재단 공식 청산 1월 완료

장애인 자립·고용·교육·일자리 지원 추진

2027년까지 국비·지방비 포함 900여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구 자립복지재단의 공식 청산을 완료하고, 해당 부지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 성덕동에 위치한 구 자립복지재단은 2015년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인 '자립빌'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이후 법적 분쟁과 소송을 거쳐 2018년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청산 완료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재단부지에 국비·지방비 포함 약 900여억을 투입해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북교육청·전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자립과 복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센터로, 총 67억원이 투입됐다. 개소 이후 1,005명의 장애인이 운동재활, 인지·심리안정, 의사소통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자립생활 체험 및 일상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체험홈에는 113명이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7년 개원 예정)은 총 291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개발기금을 활용해 설립되며, 장애인과 고용주를 위한 전문 교육·연수 공간을 갖춘다. 2025년 상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전북교육

청, 2027년 개교 예정)는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80여억을 투입해 18개 학급을 운영하는 직업중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2027년 개원 예정)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 연계를 위한 종합 시설로, 총 15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0여억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 타운 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 조성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향 모색

도의회 경산건위, 정책간담회

도 펀드 지원받은 기업 3곳

투자유치 경험담 등 사례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의원, 익산·더불어민주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펀드 투자사, 도내 창업기업과 '전북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 7명과 도 펀드 운영사 예코프로파트너스 이재훈 대표, 현대기술투자 최주열 부사장, 안다아시이벤처스 조용준 대표와 벤처기업 판조아 황은경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는 도 펀드 운영사 3곳의 전북의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도내 유망기업 발굴 등 펀드투자를 통한 성공 사례와, 도 펀드의 지원을 받은 전북자치도 소재 3개 기업의 창업 과정 속 어려움과 투자유치 경험담 등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한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들은 지역 자원과 지원 제도의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펀드 투자사, 도내 창업기업과 '전북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도내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전북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김대중 위원장은 "창업가, 투자사, 그리고 정책적 협력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역할을 더 명확히 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어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오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말 기준, 8,533억 규모, 24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해도 4개분야에 2,640억 규모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정종복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도내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기술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

보급과 활용이 확산하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도내 인공지능산업의 전략적 육성

성과 체계적인

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전북도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고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즉시 공포된다. /이만호 기자

/이만호 기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수행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장연국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연국 의원은 '디지털 사회에 직면

한 학생들이 사회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올바른 이해력 증진과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에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증세 통한 균형발전 이뤄져야”

혁신당 도당, 민주당 감세정책 반대 표명

“균형발전보다 특정 계층 이익 우선한 선택”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세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상속세까지 완화하며 감세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감세정책이 초래할 세수감소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감세정책은 균형발전보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우선한 선택”이라고도 강조했다.

도당은 “이번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유층 감세에 불과하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가구의 6.3%에 불과하며, 그중 상위 1%가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부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을 뿐,

지방에서는 상속세 감면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 부유층을 위한 조치이며, 절반의 국민이 살고 있는 지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 이전 재원의 축소는 지방 경제의 뿌리까지 말려 버릴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민주당의 상속세 감면 결정은 지방 지원 축소 선언과 다름없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재원의 재분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 감세경쟁에 나서며 조세 정의와 균형발전 원칙을 저버렸다”며 지방을 희생하는 감세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 정의와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한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질환자 취업부터 휴직·복직까지 종합관리

민주 윤준병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



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도의회 경산건위, 수소산업 현장의정활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전북의 수소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유)휴먼에노스를 방문해 운영 현황 보고 및 시설 견학을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첫 방문지인 전북테크노파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센터에서는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수소저장용기의 신뢰성 평가 및 시험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수소용품 및 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국·도·군비가 투입



되어 구축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청취·견학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유)휴먼에노스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능성 식품 연구·개발과 시설을 견학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교육위, 전북체육중·고 찾아 현장의정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18일 오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전북체육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는 현지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과 의원들은 “전북 체육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교 체육 활성화 정



책,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 교육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의장 김우민)

가 제272회 임

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전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한경봉·윤신애·우종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한세·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및 김경식 의원의 결의안이 있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 및 복구작업에 힘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장 조민규)

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의원)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3건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감사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며, 부서별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가 실시되고, 둘째날인 19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룰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2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폐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량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

(의장 박병래)

는 18일 오전9

시 제35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김형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업인 수당 제도의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재정 부담 해소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서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제359회 임시회는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오는 20일 폐회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